계엄 요건·절차, 포고령 1호 등 5가지 쟁점서 尹 운명 갈려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 위반 가능성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지적
선관위 관련 국헌문란 목적 땐 위법
정치인 체포지시, 헌재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손진영기자 son@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된 5가지 쟁점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포고령 1호 ▲군·경찰의 국회 활동 방해 ▲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다.

헌재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이 내용과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했는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살펴봤을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 된다.

국무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국회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절차 위반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

포고령 1호의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에 있었던 5·17 내란 역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두환)에게 국회 진입 및 정당 당사 출입을 금지한 지점은 내란수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권 인사를 포고령 1호 위반으로 고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활동 방해 역시 포고령 1호의 위헌성과 연결된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경찰이 출입을 막은 것은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져,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또 전날(1일) 한 매체에서 계엄군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기자를 포박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역시 국헌문란 목적이라 인정될 경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계엄법에는 행정부와 법원을 제외한 헌법기관을 봉쇄할 권한이 없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재판 내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탄핵심판에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일러줬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인 체포 지시 역시 국회 무력화 및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고, 이를 넘어선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다만 이 지점은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므로 헌재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野, 승복선언 필요"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尹 탄핵심판 앞두고 여야 여론전
與, 反 민주당·이재명 세력 결집
野,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 이어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갑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년 60세 → 65세 연장'… 민주당, 연내 입법화 추진

'회복·성장 위한 정년연장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청년·노·사·전문가와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년연장TF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등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 정리와 조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정년은 60세에 머물고 있어, 2033년 기준 60세 퇴직자는 필연적으로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퇴직자의 소득단절을 막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 숙련 근로자 노하우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년연장TF의 판단이다. /박태홍 기자

한덕수 "불법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야"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일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 선고 전후 치안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고 못박았다. /서예진 기자